

# 韓國政治學의 課題와 方向

安清市\*

<目次>	
I. 問題認識의 틀	—美國政治學을 중심으로—
1. 社會科學과 社會	III. 韓國政治學의 定立問題
2. 政治學의 正體와 任務	1. 一般的 考察
II. 現代政治學의 도전과 實驗	2. 自己克服의 課題들

## I. 問題認識의 틀

### 1. 社會科學과 社會

모든 학문활동이 다 그렇지만 특히 사회과학은 다른 학문분야에 비하여人間의 사회적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과학은 사회적 삶의 지속적 변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규명하고 행동전략을 밝혀주는 임무를 띠고 있다. 임무가 그러하기에 사회과학의 학문활동은 사회적 삶의 실제나生活上の要求와 독립되어 추구되거나 순수하게思惟的인 활동으로써만 존속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과학은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문제성」을 규명해내는 한편, 이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학문의 正體(identity)와 연구 主題를 설정하며, 이론과 방법론을 발전시켜 나간다.

사회과학이 바탕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문제성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한 형태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는 공간적, 시간적, 환경적 특성이 다른만큼 문제로 의식되는 내용이나 구조 역시 각기 다르게 표현되기 마련이다. 또한 같은 사회내에서도 역사적 문화적인 변화의 단계 또는 정치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당면하는 문제성의 성격이나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그 해결의 우선순위 등이 바뀌어 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의 중심적 과제

\* 서울大 社會大, 政治學

는 정치생활의 ‘윤리적 바탕’을 규명하는 일이었다. 반면 마키아벨리나 흉스의 눈에는 정치적 지배와 권력관계의 ‘현실적 기반’을 설명하고 쳐방하는 것이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 후 사회과학은 보다 분화되고 이론과 방법론도 더욱 정교화되었지만, 그러한 변화 역시 곰곰히 따져 본다면 인간이 갖는 사회적 관심사 및 정치적 문제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변천, 그리고 그것들에 대응하려는 知的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과학은 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설명과 효과적인 해답을 추구하는 데 유익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그 이론과 방법론이 변천하고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회 및 정치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왜 「문제」라고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때로 知的인 노력이나 理念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역시 사회변화의 현실과 정치적 여건에 기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기에 사회과학은—비록 현실로부터 헤어나고자 하는 동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현실세계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으며,<sup>1)</sup> 이 때문에 그 학문활동의 형식과 내용은 현실세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현실세계는 이처럼 사회과학 활동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그 이론과 방법론을 지도할 뿐더러 때로는 이들을 특정한 세계관에 묶어 두고자 하거나 특수한 정치현실에 복속시키기도 한다. 사회과학이 현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학문 활동에 축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사회과학 활동에는 비판적 축면과 어용적 기능 간에 긴장과 갈등이 자주 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 활동의 궁극적 동기와 목적은 현실세계에 안주하거나 얹매이기보다는 이를 전환하거나 개혁하려는 정신, 즉 인간의 보편적인 진보에의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과학이 출발한 역사적 배경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근대과학은 종교적 명령과 봉건적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권력과 신화에 의해 쳐방되어 왔던 질서관에 대한 거부운동으로 출

1) 예컨데 과도기의 知的 운동이나 혁명적 이데올로기는 얼핏 보아 기존현실을 초월하거나 현존체계에 구속받지 않는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 또한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현실로부터 출발한다」는 命題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발하였다. 그 운동은 결국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촉진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편으로 결과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근대과학의 정신을 싸잡아 자본주의 체제나 산업사회의 이념적 도구로 매도해 버릴 수는 없다. 근대과학의 밑바탕에는 개별 사회의 문제를 보편적 법칙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해결 해야 하며, 다른 어떤 관습이나 명령체계로도 이를 대치할 수 없다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는 곧 구시대의 진리관으로부터 人間을 자유롭게 하려는 ‘해방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경험적 관찰과 법칙적 사회인식, 그리고 객관적 판단기준을 새로운 진리관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 그것은 결국 봉건적 관습과 신학적 교리를 더 이상 진리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정신과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실증과학으로 대표되는 과학활동의 정치적·사회적 귀결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sup>2)</sup> 실증과학은 넓게 보면 특수한 역사적 조건과 정치적 단계에서 발생하고 발전하였으며, 그 나름대로 주어진 실천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셈이다. 다만 그것이 고도로 분화된 산업사회와 후기자본주의적 시민사회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서구적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다면 비판 받아 마땅한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다. 그러나 실증과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해서 그러한 과학활동을 뒷받침해온 과학정신, 즉 객관적인 진리 추구를 위한 노력과 보편적 규범에 대한 신뢰까지 싸잡아 거부해서는 안된다. 특정한 형태의 과학활동의 관행을 비판하는 것은 과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온전한 진리를 드러내는 새로운 과학에로의 자기발전이어야 한다. 비판활동이 곧 과학정신까지를 배격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마치 목욕시킨 물과 함께 귀중한 아이까지 쏟아버리는 격이 될 것이다. 카플란(A. Kaplan)의 말처럼<sup>3)</sup> 과학적 탐구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 활동 속에서 찾아져야 하며 이를 과학 밖에서 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학 활동의 바깥이나 초과학적 차원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곧 과학을 포기하고 그대신 權力이나 教理의 권위에 다시 복귀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자들의 活動을 지배하는 규범과 가치지향은, 그것들이 비록 개별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제에

2) Brian Fay, *Social Theory and Political Practic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5) 趙馨譯「사회이론과 정치적 실천」(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3).

3) Abraham Kaplan, *The Conduct of Inquiry* (Scranton, Penn: Chandler Publishing Co., 1964), pp. 3-6.

대한 관심에서 출발할지라도—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기도 하지만—보편적·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과학정신과 탐구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과학자도 人間이기 때문에 개인적 편견과 특수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개인의 편견과 숨겨진 가치가 과학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수 없음은 뮤르달(G. Myrdal) 등이 잘 지적해 낸 바 있다.<sup>4)</sup> 또한 쿤(Kuhn)은 과학자들의 진리탐구는 그것이 단순한 진리탐구이기 이전에 이미 패라다임이란 커다란 굴레속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sup>5)</sup> 그러나 편견과 패라다임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그 때문에 과학이 불가하다거나 주관주의·상대주의로 홀려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과학자를 속박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그것이 학문활동에 미칠 효과에 대해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에게 패라다임의 맹목적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 사회과학이나 한국적 정치학을 定立하는 문제는 우선 한국의 학문을 규정하고 있는 패라다임의 근원과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自己確認과 自己批判의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회과학은 사회현실로부터 출발한다.

둘째로 사회현실의 내용과 그것을 認識하는 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 및 가치정향과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만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출발하는 사회과학의 중심적 테마와 문제의 성격, 그리고 이를 탐구하는 이론과 방법도 변천과 발전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세째, 사회과학의 활동은 종종 현실에 안주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 정신적 밑바탕에는 보편적 원칙에 대한 신념, 비판의 논리, 그리고 해방의 의지를 담고 있다.

넷째, 과학활동의 관행 또는 도출된 지식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과 代案은 보편적 규범에 대한 신념, 이성적 해결을 추구하는 과학정신, 그리고 객관적 인식과 경험적 관찰을 추구하는 탐구의 논리와 양립하도록 해야 한다.

4) Gunnar Myrdal, *Objectivity in Social Research* (New York: Pantheon Books, 1969).

5)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의 틀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의 중심테마인 韓國政治學에 대한 論議로 옮아가 보자.

## 2. 政治學의 正體와 任務

政治學은 社會科學의 한 분야이다. 政治學은 특히 국가를 중심단위로 삼는 공동체의 정치생활을 그 구성원들이 소망하는 가치와 이상에 맞도록 개선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을 직접간접으로 요청받고 있는 學問活動이다. 예로부터 政治學의 중심테마는 權力關係를 위주로 해서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人間의 權力關係는 경제적 재화나 사회적 위신에 관련된 가치들 보다 훨씬 더 偏在되기 쉽고 지속성이 덜 해 가변적이며, 제로·섬(zero-sum)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 때문에 정치현상은 다른 어떤 사회관계들 보다도 갈등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활동은 자연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적 현실과 정치적 여건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政治學의 探究活動은 그만큼 ‘중립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론 꼭 그래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그 학문적 물음의 대상과 성격이 문화, 이데올로기, 국경, 체제와 같은 소위 비과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기 쉽다. 이를테면 한국의 정치학은 누가 무엇이라고 그 뜻과 범위를 定義하든 간에 바탕을 이루는 문제의식이 한국인의 정치적 삶, 정치적 가치와 이상을 떠나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sup>6)</sup> 그렇다고 「한국의 정치학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는 것도 또 꼭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한국정치학이라고 해서 미국정치학이나 여타의 국제적 학문조류와 단절되어 존재하거나, 상호 공유하는 제 가치, 문제의식, 개념이나 이론 및 방법론 등을 외면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과학과 학문의 발전은 다양한 이론과 논쟁을 요구한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정치적 과제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해결해 나가느냐의 문제 역시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동원하고, 논쟁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풀어 나가야 함이 당연하다. 한국의 정치학은 또한 세계의 정치학의 일원이기도 하기에 그 활동을 통해서 모름지기 인간생활의 보편적 가치와 이상에 궁극적

6)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글의 뒷 부분에서 다시 논의될 것임. 「韓國政治學」의 意味와 가치지향성에 대한 유익한 論究로는, 文丞益, “韓國政治學의 定立問題”, 「韓國政治學會報」第十三輯(1979). pp. 3-12 참조.

으로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할 때 한국의 정치학은 한국사회라는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인류적 차원의 가치와 이상 또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본연의 이념과 조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것과 통일을 기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정치학이란 한정어 즉 특수성을 지닌 학문활동과 보편적 의미를 지닌 ‘정치학’ 또는 ‘사회과학’의 목표 간에는 원칙상 상충관계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차이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대한 지적논쟁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이란 느낌이 들만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보편적 가치나 명제가 보는 이의 입장이나 처한 위치—국가, 시대, 체제, 사회경제상의 위치등—에 따라서 그 현실적 형상과 실체가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리 인식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민주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란 사상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자유, 평등, 인권, 복지, 평화등의 가치를 대표하는 정치체제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과학이 인간의 공통적 이성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인간이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위에 든 보편적 가치들이라고 한다면 정치학의 ‘보편적’인 목적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이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학문적으로 규명해 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같이 一見 보편적이어야 할 가치들이 사회나 국가에 따라서, 또한 보는 이의 시간적 공간적 위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발전단계에 따라서 그 현실적 형상과 실체를 달리하거나, 해결과제의 우선 순위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같은 정치학이라도 미국적 문제성과 한국의 그것은 —비록 학문의 궁극적 이념을 서로 같이하고 패러다임을 공유한다고 상정할 지라도— 그 인식대상의 양태나 당면한 해결과제,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미국적 상황’에 부응하여 전개되는 정치학이 ‘한국적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데 반드시 같은 정도로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美國式 발상법이 한국의 정치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학계에는 서구식 사회과학, 미국식 정치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대한 많은 비판과 반성이 일고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차제에 이 문제도 잠간 짚고 넘어 가자. 외국의 학풍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결코 보편적인 학문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외국의 것이면 무조건 백안시 하는 것도 토착화의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서양의 정치학이라 해서 획일적으로 같은 법도 없으며, 서구적이라 해서 전부 배척해 버릴 일도 아니다. 동시에 우리적인 것 중에서도 버릴 것과 지켜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구분하여야 한다. 어디까지가 지켜야 할 것들이며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취사선택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지만, 그 일 자체가 과학자들과 학문인들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선택의 전략을 학문하는 사람들만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학과 진리가 이를 외면한다면 정치와 권력이 이 기능을 독점하여 대신할 위협이 커진다는 뜻이다. 즉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데 실패하거나 그 소임을 못한다면 정치와 이데올로기 또는 權力과 神話가 그 구실을 떠맡게 되며 그럴수록 사회는 보편적 규범들과 객관적 기준들이 설 땅을 잃게 되고 만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학은 한국적 문제성에서 출발하되 보편적인 해답을 추구해 가야하며, 보편적인 기준을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한 문제들이 재발견되고 다시 설명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정치학은 ‘우리적’이며 특수적인 것들과 ‘汎人類的’이며 보편적인 현상을 사이에서 발견되는 조화와 갈등 및 상호관계의 맥락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보다合理的인 선택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을 제시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정치학이나 정치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실험은 그려기에 세계의 정치학이 안고 있는 그것들과 상통하는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런 연후에 다시 한국적 문제성에 되돌아 와서 해아려 보고 평가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우선 오늘날 정치학 일반 특히 서구정치학이 당면하고 있는 지적 도전을 가늠해 본 후, 다시 韓國政治學문제로 돌아와 이른바 土着化의 課題와 관련된 몇 가지 發展의 提案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 II. 現代政治學의 도전과 실험—美國政治學을 중심으로<sup>7)</sup>

정치학은 학문적 관심을 보편적인 치식체계를 구축하는데 두고 있다. 그

리나 앞서 말한대로 정치학의 현실적 모습은 그것을 잉태시킨 고장이나 발전시킨 역사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정치학은 19세기 서구사회의 지적 특성과 역사적 과제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 학문관과 방법론적 전통이 정립되고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서구사회의 정치제도, 사고의 스타일, 현실인식의 방법 및 규범에 대한 태도 등은 정치학의 탐구 분야와, 목적, 이론 및 방법론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20세기부터 정치학의 중심지는 美國으로 옮겨지고 이로 말미암아 정치학의 성격은 美國的 전통에 부응하여 다시금 변천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근대 구라파의 지적 전통으로 말미암아 정치학은 일찍부터 자유주의 및 人本主義의 에토스와 人民主權의 사상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美國으로 건너온 후 이러한 학풍 위에다 정치학은 다시 美國的 개인주의, 自治制, 양당제 등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성향을 첨가하였다. 또한 사상사적 경향이 강했던 구라파적 전통에서 시민교육이 보다 중시되는 美國式 스타일이 가미되었다. 게다가 19세기 말엽 미국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되자 정치학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의 정치적 요구와 문제해결에 기여해야 할 실용적인 요청에 당면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주권이나 法制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학이나 制度中心의 정치학 연구 경향은 점차 쇠퇴해 갔다. 반면에 개인의 정치행태라든가 정부의 정책 또는 그 효과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중시되었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에 대한 단원적인 설명보다 정치권력의 다원적 성격과 기능에 대한 경험적인 이론들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아더 벤틀리(Arther Bentley), 찰스 메리암(Charles Merriam) 등의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되어 이른바 다원적 권력이론으로 확립되었고 보다 체계적인 관찰과 이론화를 중시하는 美國의 학풍으로 발전하였다.

## 2차대전 이후 정치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조로 행태주의를 빼놓을

7) 美國政治學의 發達과 現況에 대해서는 다음 저작들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밝혀 두고 본문안에서는 번잡한 각주를 생략하기로 한다. Fred I. Greenstein and N.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1: Political Science: Scope and Theory*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5); Michael Haas and Henry S. Kariel, eds., *Approaches to the Study of Political Science* (Scranton Penn.: Chandler, 1970); Bernard Crick, *The American Science of Politics: Its Origins and Condi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9); Charles E. Lindblom, "Another State of Min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1 (March, 1982), pp. 9-21.

수 없을 것이다. 행태주의는 정치학을 자연과학에 준하는 엄밀한 과학으로 발전시키자는 운동으로서 일명 과학주의의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서술과 관찰주의를 피하고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이론 수립을 강조하였다. 행태주의는 선형적 추론이나 추상적 일반화 및 법과 제도 중심의 연구를 거부하고 개인과 집단의 행동과 상호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창하였다. 또 이 운동은 학문활동에서 사실과 가치를 일단 분리시켜 고찰하고 성급한 행동이나 응용에 앞서 이론과 지식을 우선 축적해 갈 것을 제의했다. 동시에 행태주의는 계량적 방법을 광범위하게 원용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다.

40년대에 시작된 행태주의는 50년대 말기에 와서 그 절정기를 이루었다. 6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렇다하는 정치학자가 되려면 행태주의를 표방해야 할 만큼 그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행태주의 학파는 숫적으로 미국학계에서 다수를 차지 할 뿐더러 학풍상으로도 주류를 이루었다. 행태주의가 풍미하던 바로 이 시기는 국내적으로는 뉴딜정책에 성공하고, 국제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한 미국이 구라파의 전후 복구는 물론, 동서냉전에서 자유진영의 기수역 할을 떠맡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세계 도처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던 이와 같은 눈부신 활약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데 대한 자신감과 낙관적 발전관을 팽배시켰다. 전체주의에 대한 승리의 자부심과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은 체제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보다도 민주정치의 기술적 문제와 기능적 요건에 학문적인 관심을 집중하는데 만족하도록 만들었다. 행태주의는 이와 같은 정치적 무드와 환경의 산물인 동시에 바로 그러한 환경에 부응하여 변창하고 또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적 정치기류는 그 생명이 오래 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정치학의 내용과 방법도 그 후 새로운 전환과 반성의 시험대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

70년대에 들어와 미국 사회는 월남전의 수렁으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학원소요를 겪은데다, 반전·반핵운동 민권운동 등으로 그때까지 구가해 오던 안정기조가 크게 혼들렸다. 국제적으로도 후진국의 정치불안과 탈냉전화 추세가 가속되었다. 이 모든 요인들은 美國人們이 고수해 왔던 문명에 대한 낙관적 미래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일상적 신념과 기대를 크게 혼들어 놓았다.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이 민주주의의 열쇠요, 정치적 위기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란 신념도 점차 퇴색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현실에 대한 보다 근원적 이해를 추구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문제해결에 보다 적실성을 갖춘 이론과 방법론이 요청되었다. 이와같은 정치적 현실을 배경으로하여 대두한 것이 비판이론과 후기행태주의의 방법론이다.

새로운 지적 도전은 미국 정치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보편적’ 학문이념을 스스로 대표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정치학이 기실은 ‘미국적’ 규범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성과 자각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반성과 자각은 곧 상당수의 중견급 美國 정치학자들 간에 「미국 정치학이 世界문제는커녕 미국 자체의 정치적 문제를 설명하고 처방하는데도 그 적실성이 점점 의문시 되고 있다」는 회의를 낳게 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반성과 자각은 미국학계의 주요저술과 이론들이 바탕하고 있는 규범적 가정과 인식방법까지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운동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와같은 운동은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그 정체를 분명히 이것이라고 짚어낼 수는 없다. 따라서 전통적 이론을 대체할 만한 代案이나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할 단계에 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이미 정치학의 연구와 교육의 경향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으며 미국 사회의 지적 풍토에 서서히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시기와 최근의 미국 정치학계 주요 학술지의 목차나 논문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눈에 뜨일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좋은 예로 소위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이 일종의 보편적 경향으로 받아들여진 점을 들 수 있다. 다원적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수정 작업이나 비판을 전개한 글들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급이론과 국가론의 분석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노력들도 크게 부활되었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정치학의 연구대상은 한층 확대되었고 보다 균형된 이론과 다양한 시각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정통학파 안에서 종래의 이론과 방법론에 내재하는 결함을 보완하고 극복해 감으로써, 정통 정치학을 수정해가려는 노력이 증진되고 있다. 그 결과 오늘의 미국 정치학은 과거보다 더욱 구라파의 학문조류와 빈번히 교류하는 한편, 마르크스주의 및 급진주의 이론들과도—비록 선별적이긴 하지만—친화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美國의 정치학은 美國人們의 정치적 현실과 그 변화에 부응하며 점진적으로 자기발전과 자기수정을 해 왔다. 美國社會는 외부적 충격이나 어떤 급진적 대안도 그 속에서 서서히 용해되고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그들의 학문도 결코 그 외양이나 내용상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급격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美國의 특징이요, 또한 強點이기도 하다. 구라파의 정치학이 일찌기 변증법적 전통을 수용하여 급진주의 이론을 구라파적 현실에 맞추어 재정립해 가는 동안 미국의 정치학은 그 이론적 정교성과 방법론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로 인하여 변증법적 전통을 미국 정치학에 수용하는 작업은 구라파 보다 약 10년정도 지체되었다. 그러나 이 時差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정치학계의 반성과 자각으로 말미암아 착실히 메ぐ어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미국의 정치학은 행태주의 방법론과 비판이론의 분석논리를 상호접합시키는 노력을 통해 보다 차원 높은 학문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 모델을 주축으로 하되 변증법적 개념을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자택일적 선택 보다는 절충적 모델과 점진적 상호수렴에 이르는 학풍을 진작시켜 가고 있다.

미국 정치학이 과도하게 자유민주주의적 편견에 치우쳐 적실성을 상실하였다는 비판적 견해는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이나 급진주의 모델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치권력을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중립적 활동으로 보거나 국가를 자비로운 갈등조정기구로 보는 자유주의 정치학을 비판하고, 정치는 강자의 기득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이며 그 과정은 폭력과 투쟁으로 점철되는 불연속적 변화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이나 정치사회화의 제과정은 지배자의 이익과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indoctrination'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이와 같은 비판이론과 급진주의사상의 공격앞에 자유주의 정치모델은 확실히 방어적, 수세적 위치를 면치 못하고 있고, 여러가지 이론적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 급진주의적 모델이 과연 정통적 정치학을 대체할만큼 충분한 타당성을 지녔으며, 보다 나은 정치학의 장래를 보장할만큼 우수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물론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결코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보다도 정치학의 미래상은 이 두 패러다임과 방법론적 전통이 상호수렴해가는 과정속에서 그

位相이 定立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정치학이 변증법적 모델과 상호결충하고 종합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정치학의 주제 설정과 이론수립, 그리고 방법론의 발전에 미칠 잠재적 기여도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비판적 분석논리와 변증법적 이론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유주의적 정치학이 소홀히 다루었던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갈등, 구조적 모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등의 문제들을 핵심적 연구과제로 끌어들이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분석시각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실체를 중립적 심판자나 자비로운 관리자로 보는 종래의 타성을 수정하여 강자와 약자의 투쟁과 갈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시장체제의 경쟁논리는 인간에게 편익과 자유를 주는 반면一次元的 人間이나 自動人—하버마스와 마르쿠제의 표현을 빌리면 ‘묵종적 성향’(acquiescent likemindedness)을 지닌 인간형—등 소외된 다수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안목과 통찰력은 정치학적 상상력을 한층더 고양시켜 줄 것이다. 이와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둘 중 어느것이 보다 나은 정치학의 모델인가를 따지는 것은 쉽지도 않거니와 그 의의도 의문시 된다. 양측의 주장을 서로 보완시키고 때로는 상호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이 어느 한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生產的 학풍조성에 이바지 하는 길일 것이다.

한국정치학의 정립 문제나 방법론의 토착화와 관련된 과제들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풀어야 할 것이다.

### III. 韓國政治學의 定立問題

#### 1. 一般的 考察

한국정치학의 현황에 대한 논의나 비판, 한국정치학의 정립 문제와 토착화의 필요성, 또 그 바람직한 方向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곳에서 다루어 진 바 있기 때문에<sup>8)</sup> 여기서 재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이 글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논제의 성격에 비추어 현대정치학이 직면한 도전을 한국

8) 예를들면, 「한국정치학회보」 12집(1978)의 “전국 30年の韓國政治學” 및 13집(1979)의 “韓國政治學의 定立問題”에 관한 특집 논문들을 참조.

의 학문활동에서는 여하히 수용하고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앞에서 학문활동의 목표가 인간생활의 문제성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동원하여 사물의 본질과 실체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과학정신에 있다고 풀이하였다. 과학은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 객관적 표상에 대한 단순한 체계화를 피하는 노력이나 가치중립적 사실 인식의 행위보다 훨씬 심오하다. 그것은 특수한 가치나 부분적 이익을 피하는 어설픈 주관성이 아니라 사람마다 공통으로 지닌 이성의 지평에 근거하여 사물의 의미를 살피되, 제 현상을 그 자체의 구조와 법칙에 비추어 인식 하려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과학은 기준의 지식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물음을 제기하며, 자기반성과 자기변화를 통해 인간 해방의 大義와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어중간한 비판파도 다르다. 그것은 또한 특수한 주제를 다루되 보편적인 것을 지향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 정치학의 주제설정과 문제 인식의 틀은 당연히 '우리적(的)' 이어야 하되, 동시에 '과학적'인 원칙과 방법에 근거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미국적' 정치학을 탈피하여 '우리적' 문제의식에 근거하는 한국정치학을 정립하자는 주장과, 문제제기, 주제설정, 이론과 방법론이 '과학적'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명제가 혼동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제기와 주제설정을 비롯한 학문활동의 제과정이 과학적인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미국적 정치학을 탈피하는 데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실은 '진정한 우리'를 확인하는 일에도 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칫하면 이는 과학자들이 당연히 그들의 학문정신과 직업윤리에 입각하여 지키고 감시해 나가야 할 임무를 쉬 포기하게 만들거나, 책임회피론에 안주하도록 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과학과 과학자가 개방사회와 자유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포기하면 결국 그 진리는 권력이나 무력이 대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적 학문관 및 과학정신과 양립하는 방향으로 한국정치학을 재정립해 가는 쉽고 유일한 길이란 있을 수 없다. 과학의 자기비판과 자기회복 정신을 살려 부단히 그리고 한결음 한결음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 길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길과 택해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사실 과학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나, 과학에 대한 비판론, 그리고 과학에 대한 지나친 비판 중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택할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과학과 문명에 대한 과도한 비판의식은 자칫하면 건설적 비판의 한도를 넘어 극한적 상대주의 내지는 주관주의로 흐르거나 배타적 학문관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부정을 위한 부정은 건전한 학풍조성에 방해됨은 물론 건설적 사회의식이 싹틀 소지까지도 앗아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과학에 대한 균형있는定向과 신뢰를 회복해 가야 한다. 과학은 인간의 미래와 사회의 장래는 열려 있으며, 선택이 가능하다는 신념과 희망 위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현대정치의 도전은 분명 안일한 이론화나 아카데미즘 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성격과 복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균형된 감각으로 무장하고, 이들이 가져다 줄 약속과 혜택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정진해 나간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가까와 질 것이다. 설사 그 가능성과 장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과학이외에 우리가 의지할 보다 확실한 희망은 없지 않는가?

아울러 우리는 학문에 있어서 외래적인 것을 취사선택하고 토착적인 것을 조화·발전시켜 나가는 기준을 더 개별하고 세련시켜 갈 필요가 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나 특정 학풍 또는 이론에 대한 감정적 평가에 치우쳐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무조건 백안시 해버리는 태도는 어느 것이나 생산적 학풍조성에 이바지 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된다. 예컨대 우리가 민주주의를 논할 때 흔히 미국의 정치과정을 직접 간접으로 그 준거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미국정치과정 중 그 일부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독특하게 갖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적 특성과 밀착되어 있어서 그 어떤 나라도 이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방대하고 비옥한 국토, 청교도적인 社會文化的 배경, 복잡한 인종구조등에서 생기는 정치적 특성 및 사회 구성의 여진들이 아마 이런 것들에 속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적인 정치과정중 어떤 부분은 다른 나라에도 타당하고 얼마든지 수용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유를 비롯하여 인간이 누릴 혜택들은 최소한 자유로운 의견의 원만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개별목표가 민주주의의 제 원칙과 양립하려면 최소한 경제의 주요 부분들을 시장요인의 자유로운 작용에 위임하는 자본주의체제

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미국정치의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닌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이 외국의 역사와 정치적 경험 중에서 그들 사회의 특유한 전통이나 환경과 밀착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려내어 필요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그 방법을 개발해 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전통이나 역사과정상 특유하게 나타나는 현상과 과제를 규명하는 작업과 병행되어 나갈 때 한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편적인 학문이념에 맞는 지식체계를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전진한 학풍조성의 길이 될 것이다.

요즈음 「제 3 세계론」이 1, 2세계 중심의 인식논리를 비판하고 제 3 세계의 독자적 이데올로기와 과학이념을 대표하는 시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이론은 마치 구시대의 구속을 박차고 민중들이 나라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역사의 무대위로 등장하게 된 민주혁명에 버금갈 만큼, 그동안 1, 2세계 중심의 세계사가 만들어낸 허다한 넌센스와 선화의 배일을 벗기는 한편, 바야흐로 제 3 세계가 우리시대의 세계사에 공동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참여 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제 3 세계론이 제시하는 인식론적 틀과 학문적 시각은 매우 중요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금까지 1, 2세계에 편중되어 왔던 世界觀들이 사실은 ‘부분적’인 진실에 그치고 있음을 일깨우고, 이와같은 사실인식으로부터 보다 온전한 世界觀, 보다 보편적인 진실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새로이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 3 세계론은 본의 아니게도 아직까지 통속적 비판논리에 머물거나 그 수준이 배타적인 자기중심주의 및 간혹은 적대감정에서 우러나는 복수심의 발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우리가 제 3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무조건) 그래야 한다든가 우리도 1세계 또는 2세계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보자는 식의 제 3 세계론은 자칫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자기식으로만 보는 독단에 빠지든가 자가당착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제 3 세계적 입장과 관점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좋아서라거나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오하고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결부된 정신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1세계 또는 2세계 중심의 세계관이나 과학모델의 그

늘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던 사물의 실체를 보다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고, 부분적인 세계(예컨대 서양적 세계관)에만 타당했던 종래의 인식방법과 이론을 바로잡아—제 3 세계도 그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기여하기 때문에—보다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니는 새로운 과학을 구축해 나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제 3 세계적 관점에 서는 연구는 과학의 정신과 원칙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온전한 과학을 지향하는 자세와 노력을 요구한다. 동시에 그것은 1, 2 세계적인 것과 3 세계적인 것들을 서로 구분하고 분리시켜 각기 뿔뿔이 헤어져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세계관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조화시키고 통합해 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그것은 1, 2 세계가 각기 주장하는 질서관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는 일과 함께 第三世界의 질서관도 개방하여 외부세계의 발달된 과학문명을 배우고 그 축적된 역사의 경험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정치학을 정립해 나가는 과제도 바로 이와같은 원칙과 이념에 의거하여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韓國政治學이 이와같은 도전을 감당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課題들 부터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와같은 물음에 유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政治學活動을 알게 모르게 지배해온 패라다임의 正體를 재검토하고 그 限界를 드러내는 일부터 착수해 보자.

## 2. 自己克服의 課題들

한국의 사회과학은 불행하게도 그 뿌리가 한국사회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외래적 사회모델을 수용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사회과학이 사회현실로부터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애초에 한국의 사회현실에서 출발하지 못한 한국의 사회과학이 그 토착화 문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로부터 제기되는 이론과 현실사이의 갭이나 方法論上의 혼란은 그 배경에 한결같이 이와같은 딜레마를 깔고 있다. 사회현실이 그 사회의 역사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체경험의 종합적 표상이라면 사회과학은 그 총체적 外觀(appearance), 또는 이미지(image)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변부적인 사회현실이 존속하는 한 그 이미지인 사회과학의 주변부성 또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주변부성을 탈피하여 중심부사회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사회과학의 토착화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불가하다는 논리도 옳을 법하다.

그렇지만, 앞에 제시한 과학의 임무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사회과학의 임무는 한편으로는 바로 이 주변부적인 사회실체를 객관적·체계적으로 드러내어가는 작업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주변부로부터 벗어나 중심부로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의 表像이어야 한다. 한국사회과학 또는 정치학의 自己確認問題는 따라서 우선 우리의 학문활동이 한국의 사회현실을 과학적으로 드러내어 설명하는 일에 과연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따져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과학과 정치학의 「韓國化」問題란 다름 아니라 이러한 작업의 성패와 시비를 가려내어 주변부적 사회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方向性(directionality)과 活力(vitality)을 새로 주입시키는 과업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과업은 물론 자기중심의 세계관으로 퇴보하는 것이어도 아니되며 동시에 외래적 규범을 은연중에 숨기고 있는 특정한 학문관행이나 패 라다임에 맹종하는 것이어도 아니된다. 「韓國化」와 自己確認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와 「그들」이 각기 다른 세계관으로 갈라서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세계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온전한 진리와 보편화된 이념의 地平에서 만나자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과제에 유의하면서 한국정치학이 출범한 경위와 지난 40여년간 발전해온 자취를 살펴보자.

정치학의 범위를 크게 잡는다면 한국 정치학의 역사는 사회과학과 역사학, 인문과학이 분화되기 이전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李朝時代의 儒學者들은 그 시대의 정치문제에 대한 知的 탐구와 社會참여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정치학자와 맞먹는다. 丁茶山은 한국 정치학의 탁월한 저술가임에 틀림없다. 한말 개화기의 선각자들도 훌륭한 정치학자들이었다. 日帝의 식민통치기에도—日本の 국가학이나 국법학의一部로서 이긴 했지만—政治學은 있었다. 그러나 독립된 민주국가의 정치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학은 아무래도 1945년 이후부터 그 출발을 잡아야 할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 학계는 처음에는 日本으로부터, 그리고 그 후에는 미국정치학의 압도적 영향을 받으면서 ‘현대적’ 의미의 정치학<sup>9)</sup>을 수용·발전시켜 왔

9) 여기서 現代的이란 말은 독립된 민족국가의 이념과 정책을 탐구의 대상으로 다

다. 해방조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정치학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혔으며, 정치만발시대의 정국은 정치학을 더욱 부각시켜 유능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두 정치학과로 모여들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정국의 불안정과 신탁통치를 둘러싼 이념적 분열 및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학문이 온전히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길러질 수 없었다. 좌·우의 이념투쟁의 틈바구니에서 학문이 自主的으로 설 수 있는 터전이 조그마 든데다 6·25의 타격 앞에 그 터전은 더욱 위축되어 갔다.<sup>10)</sup>

5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학문에 대한 의욕은 증대하였지만 이승만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정치학 연구의 풍토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독재정부는 정치학을 권력 담당자에 봉사하는 것으로 만들거나 정치권력의 이념조작용으로 동원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동원된 학문 이외의 연구는 고작해야 반정부적·저항적 사회참여의 성격을 띠거나, 아니면 현실정치와 담을 쌓은 체 상아탑을 구가하는 관념적 지향을 일삼기 쉽다. 한국 정치학의 경우도 이와같은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냉전의 틀 속에서 美國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았던 정치현실은 우리의 학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정치학은 자기나라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외국의 이론과 업적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한국정치학은 출발 당시부터 정치학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고 그후에도 自主的인 政治社會觀과는 유리된 발전의 경로를 걸어왔다.<sup>11)</sup>

1960년대에는 美國의 원조계획이나 6·25전쟁 중에 美國으로 갔던 유학생들이 대거귀국하면서 행태주의적 학풍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학자들은 군사정부에 의해 정치권으로 충원되었고, 제3공화국이 안고있는 정치적 한계로 말미암아 이때까지도 우리사회의 현실에 학문의 뿌리가 내리는 계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간간히 정치학의 토착화에 대한 주장과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은 학계의 공통관심을 대표했다

---

루는 학문이란 점과, 정치학의 목표가 국민을 통치대상으로 놓고보는 지배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다같이 포함하는 全體社會體系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 즉 민주적 가치와 규범에 두고있다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10) 金桂洙, 「自由民主主義와 韓國政治」, (전예원, 1985), pp. 357-371 참조.

11) 金榮國, 「韓國에 있어서의 政治學의 發展」, 「韓國政治學會報」 제11집(1977), pp. 39-49.

기 보다 몇몇 개인연구자들의 자조적 느낌의 발로나 산발적 주장의 범위를 크게 넘지 못했다.

1960~1970년대에는 行態主義的 方法論과 함께 전래된 근대화이론이—군사정부의 정책과도 맞아 떨어져—크게 한국정치학계를 풍미하였다. 그러나 이들 이론과 방법론은 그 패라다임에 내재하는 철학적 전제와 가치지향, 그리고 역사적 기초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거치지 못한 채 수용되었다. 더구나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래이론에 안이하게 의존한 결과 超事實的 一般化(hyperfactual generalization)의 폐단만 낳고 말았다. 그 결과 정치학의 이론체계와 한국정치현실은 서로 겉돌아가는 관계에 머물게 되었다. 즉 정치이론은 한국정치의 현실설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정치학은 정치와 정책에 대한 온전한 처방이 되지도 못했다. 이론은 다만 교육용이나 교과서용으로 필요한 정도거나 아니면 근대화이론처럼 군사정부의 先成長 後分配策과 開發獨裁를 뒷받침하는 논리로動員되고 말았다. 그럴수록 우리학계는 구미학계의 동향에 의존하여 그쪽의 변화에는 더욱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우리사회의 현실과 그 변동에는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일종의 自我不感症에 빠져갔다.

1970년대에서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한국사회가 산업화라는 전대미문의 구조적 변혁을 겪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 변혁을 거쳐오는 동안 우리사회와 가치와 규범은 한층 더 복잡다양해지고 해체와 재편과정을 거듭하였다. 自生的・自主的 학풍이 뿌리내릴 만한 사회적・정치적 전통과 토대를 갖지 못한 채 일천한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정치학은 오늘날 산업사회가 안겨다 준 정치적 유산에 대하여까지도 적설성있게 반응해야만 하는 부름을 받고 있다.<sup>12)</sup>

오늘날까지도 한국정치학은 미국정치학의 理論과 方法論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와 크게 다를바 없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韓國政治學界에서는 과거의 전통을 재검토하고, 학문과 사회를 보다 가깝게 연결시키려는 노력과 운동이 그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첫째 한국정치학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70년대 말부터 韓國政治學의 定立과 方法論의 土着化문제를 특집계획과 연구논문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12) 韓培浩, 「韓國의 政治」(박영사, 1985), pp. 321-334 참조.

다루어왔다. 학회보에 실린 글들을 보면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그동안 우리의 정치학이 자체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면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며, 앞으로 우리의 사회현실에 필요하고 또한 그와 직접 관련되는 연구를 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sup>13)</sup>

둘째, 보다 많은 학자들이 여태까지 현실문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회피해오던 자세를 지양하고 現代韓國의 정치문제 또는 산업화의 과제와 직접 대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의 학자들이 학회 활동에 대거 참여하고 이들이 종속이론, 국가이론, 마르크스주의 및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등 비판적 사회과학모델을 한국학계에 도입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의 경제적 침체와 외채문제등과 관련하여 권위주의화 해가는 정치체제의 현실앞에서 미국적 학풍을 비판하고 나서는 학자들 중에는 南美社會의 연구결과와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도출된 정치경제론적 분석을 지배적인 학풍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sup>14)</sup> 이들은 지금껏 정통이론에서 경시해 오던 사회경제적 관점과 歷史性을 중시하고 한국의 사회현실과 직접대결하려는 점에서 정치학의 한국화운동에 매우 귀중한 活力を 불어 넣고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모델들이 안고있는 약점과 문제점에 대한 극복에 앞서 성급히 비판적 모델들을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기존학계에서 이루어진 업적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학계의 연구 풍토를 특정이념에 편중된 방향으로 끌어갈 위험도 없지않다.

세째로 지적해야 할 점은 학제 바깥의 바람때문에도 政治學이 과거와 같이 현실문제와 담을 쌓고 직접대결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되어간다는 것이다. 근래 대학생들과 일반인들 중에서 해방전후의 한국사회를 재인식하려는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가고 있다. 한국문제를 설명하려는 學界의 이론모색이 부진한 상태에서 이들은 주로 외국의 급진적 사상이나 좌경화된 서적들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한국사회의 발자취를 왜곡된 해석이나 편중된 견해에서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학계가 대학생이나 일반독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학문적으로 깊이있게 조명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만큼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도 한다.

13) 앞에든 「韓國政治學會報」 12집(1978) 및 13집(1979) 참조.

14) Dal-Joong Chang, "The Current Status of Political Science Research in Korea", 「國際政治論叢」 24집, 1호(한국국제정치학회, 1984), p. 217.

정통사회과학과 비판사회과학적 定向간에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다른 한 편으로 學問의 韓國化 課題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간다는 것은 한국사회과학과 정치학의 앞날을 생각할 때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요, 시작은 곧 반이라는 격언과 같이 우리 학계는 이미 정치학의 한국화 작업에 깊숙히 들입한 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 안에는 현실논리와 비판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이 학문사회까지 갈라놓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적」 사회과학과 「한국정치학」의 참된 목표는 양극화된 세계관을 고집하는 집단들간의 상이한 입장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들의 소외된 감정과 상처를 치유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 함께 共生共榮할 수 있는 地平을 열어주는 일이어야 한다. 현실론자나 비판론자나 다 같이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人間의 幸福」과 「人類共同體의 장래」에 있다는 사실은 곧 양자의 입장이 서로 합치될 수 있는 共通地平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地平을 열어가려는 노력과 그 과정의 성패여부에 따라서 韓國政治學을 주변부적 위치로부터 중심부로 끌어올리는 작업의 성패도 좌우될 것이다.

政治學의 「韓國化」問題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결론삼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政治學은 먼저 정치학 자신의 非文化性 부터 씻어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學問活動을 규정해오고 있는 편견과 패라다임의 실체와 그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학문활동이 오늘의 현실에 보다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함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현실에 잘 반응해오지 못한 우리의 정치학이 산업사회의 도전앞에 들어낸 停滯感과 無力症, 安逸主義은 우리나라 사회과학과 政治學에 다음과 같은 폐단을 가져왔다. 첫째, 實證科學의 전통이 비판 또는 부정되고 그 대신 과학활동이 이념적 사고와 규범체계에 밀려나는 경향을 낳았다. 둘째, 사상 및 이론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양분화된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 양자를 각자 독립된 지적활동으로 보거나 서로 배타적인 시각으로 구분하는 경향을 낳았다. 세째, 이러한 경향들은 비판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을 크게 고양시켰으며, 그 반작용으로 인해 소위 정통과학이 비판되고 이와 함께 구체적 사회현실에 대한 경험적 관찰과 미시적 분석이 정치학 연구와 교육과정에서 경시되는 풍조를 유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세째로 우리는 「韓國化」의 문제를 우리 사회와 정치체제에서 만연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분열된 세계관을 통합하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우리는 서로 대립되는 세계관을 주장하는 이들이 지닌 한계와 약점을 지적하는 일도 물론 해야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그들의 세계관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 현실론자들의 세계관과 점진주의로 부터 우리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이상론자와 비판론자의 안목으로 부터 사회문제에 대한 뜨거운 정열과 정치문제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배워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韓國化의 문제는 韓國人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되, 그것은 나아가서 科學精神이 추구하는 보편적 원칙과 만날 수 있어야 하며 人間解放의 大義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韓國的政治學」의 바람직한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定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 問題意識이 우리사회의 현실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우리사회와 問題性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다양한 반응양식들, 갈등적 정치관 등이 갖는 장단점 및 그 가능성과 한계를 잘 드러내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째, 韓國人의 정치적 삶의 質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네째, 이상의 活動들을 통해 人間의 보편적 이성과 공통적 가치체계의 地平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